

## 6.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과정

- 제출일자 : 2008년 2월 7일
-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기획관리실장)
- 회부일자 : 2008년 2월 7일
- 상정 및 의결
  - 제16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2008년 2월 18일

### 2. 제안설명 요지

-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토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정책토론회는 청구일 현재 19세 이상 주민 300여명의 연서로, 3명 이내의 토론청구인 대표자가 시장에게 청구하고, 시장은 토론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3조)
- 정책토론 청구대상은 청구인들이 요구하는 시의 주요정책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인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은 제외하도록 함(안 제4조)
- 시는 정책토론 개최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 토론청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토론회 개최여부를 결정하고, 토론회 개최를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9조)
- 토론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토론결과에 대해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10조, 안 제11조)
-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

### 3.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동의와 지지에 기반한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추진을 위해 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논의하는 “정책토론청구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조)
  - 정책토론회는 청구일 현재 19세 이상 주민 300여명의 연서로, 3명 이내의 토론청구인 대표자가 청구하고, 시장은 토론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안 제3조)
  - 정책토론 청구대상은 청구인들이 요구하는 시의 주요정책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인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음.(안 제4조)
  - 시는 정책토론 개최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9명에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두고(안 제5조)
  - 토론청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토론회 개최여부를 결정하고, 토론회 개최를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안 제9조)

- 토론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토론결과에 대해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음.(안 제10조, 안 제11조)
-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14조)

####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동의와 지지에 기반한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추진을 위해 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논의하는 “정책토론청구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시민 의식수준 향상과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의지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시정의 주민참여를 위해 행정의 각 분야에서 새롭게 수립·시행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참여 예산제도”, “명예감사관제” 등 각종 주민참여형 제도와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조치로 사료되며,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 및 유관기관 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시행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1조, 안 제2조는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와 정책토론청구제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3조는 정책토론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청구일 현재 19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으로 하고, 3명 이내의 토론청구인 대표자가 별도의 서식으로 청구하도록 명시하는 등 청구요건과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며,

안 제4조는 시민의 정책토론청구 대상을 청구인들이 요구하는 시의 주요정책으로 하되, 청구내용이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거나, 수사 또는 감사·재판 중인 사항,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의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는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6조를 준용하여 주민감사청구 시 요구되고 있는 연서 주민수 및 주민의 감사청구대상 제외 사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는 정책토론 개최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시의회 의원, 법조인, 소속 공무원 등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정책토론청구 요건의 심사, 정책토론 실시여부 심의·결정,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 안 제7조 및 제8조는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는 주민의 정책토론청구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토론회 개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개최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토론회 실시 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0조는 토론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토론방법 등에 대해서는 청구인 대표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 안 제11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토론결과를 토론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2조는 위원회와 관련한 업무는 위원회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토론회 개최와 관련한 업무는 토론청구대상 업무 추진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이는 담당부서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업무영역에 대한 역할의 구분을 통해 제도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됨.

- 안 제13조에는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과 안 제14조에는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 청구제” 도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 규정에는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오늘날과 같이 발달된 각종 미디어를 통해 정책토론이나 여론수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자유롭게 발표되는 언론 정보화시대에 과연 제도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본 정책토론회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회의가 제기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로 본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 정책 토론시 방청인원의 제한규정은?	○ 공개와 비공개로 구분되며, 공개의 경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음.
○ 이번 조례안은 시민참여를 통한 열린 행정을 위한 것으로 무엇보다도 홍보와 활성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정책토론의 모범사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적극 노력하겠음.

## 5. 토론사항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전원찬성)